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 해병 순직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 재판부 “이첩 중단, 정당한 명령 아냐”

박 전 단장 “군판사에 경의... 채 해병 죽음 억울함 없도록 혼신의 노력할 것”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고 채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고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같은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이종섭 전 장관은 조사결과 이

첩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김 사령관 또한 박 대령에게 민간으로의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게 군 검찰 측 주장이다.

박 대령은 당시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겨, ‘항명 혐의’로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다. 또한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

이후 군사법원은 2023년 12월 7일부터 지난해 11월 21일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의 직무 및 지휘 감독권의 범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장관 지시 목적은 채상병 사망사건 처리 보고서 결과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

록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더불어 국방부 장관의 지시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이날 선고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의 정의로는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며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할 것”이라며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축하를 받고 있다.

민주 도당 “법정에 서야 할 죄인은 박정훈 아닌 尹”

박 대령 1심 무죄 판결에... “특별법 거부로 좌절됐던 진상·외압 몸통 밝혀내야”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청년 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다 법정에 섰던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군 사법체계를 교란한 부당한 권력의 실체를 밝히는 시작임을 강조했다.

도당 김솔지 수석대변인은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청년 해병의 죽음에 드리워진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해당 사단장의 지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것을 적시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수사를 방해하고 급기야 박 대령을 항명과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이들의 은폐와 조작은 국민적 분노를 초래했고 특히 채해병의 고향인 전북 도민은 자식을 떠나보낸 애절한 심정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해왔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북도민의 염원은 민주당 중심의 국회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으로 발현됐으나 윤석열 일당의 세 번의 거부권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려 했다”며 “박정훈 대령은 부패한 권력과 부당한 압력에 맞서 군

인의 양심과 국민의 양심을 지켰다. 박정훈 대령은 권력에 맞서 일시 법정에 섰지만 정작 법원에서 단죄할 대상은 권력을 사유화해 남용한 윤석열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제껏 흔들리지 않고 지켜낸 박정훈 대령의 양심적 행동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특별법 거부로 좌절됐던 사건의 진상과 외압의 몸통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정훈 대령과 함께한 해병 전우와 국민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북의 아들 채상병 가족의 아픔을 진실과 정의로 위로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법 시행 주요 특례 - 첨단산업 특례

도, 첨단산업 육성 전초기지로 도약

차별적 지원 아닌 신산업 테스트베드 공간 활용 적극 어필

이차전지·바이오 미래 먹거리 발굴... 전통산업 다지기도

생명경제 실현할 수소·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도 집중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을 발판 삼아 첨단 신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차별적 요구가 아닌, 신산업의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이차전지와 바이오산업을 비롯해 전통적인 강점 산업인 탄소와 수소,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법에 마련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비전이다.

지난 2023년 국가가 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새만금에 지정한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는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등 이차전지 기업을 위한 인프라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R&D 지원체계를 조성하고,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진기업형 협업플랫폼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최고의 테스트베드 공간을 그려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생명경제 바이오(산·학·연·병·관) 얼라이언스를 구성하는 동시에 미국 하버드대학교 등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바이오 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바이오기업 150개사의 유치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을 공격적으로 투입,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특례를 바탕으로 개발-인상-인허가-생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탄소소재 기술력과 의료 인프라를 결합한 혁신 의료기기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센터에서 의료기기 설계·제작·시험평가, 글로벌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에서 임상·비임상 시험을 수행한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수소 산업에 일찍 눈을 뜬 전북자치도는 육성계획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수소경제 이행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간 수소용품 및 연료전지 인프라 4개소와 수소 생산기지 2개소(3.4톤/일), 수소도시(전주·완주, 부안) 조성 등 기반을 다져온 전북자치도는 최근 현대자동차와 수소산업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소 생태계 전반에 대한 협업을 강화한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이번 특례를 기반으로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정점수소 클러스터 예타 기획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인증 센터 구축 △수소특화단지 지정 준비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인프라 확충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제2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전략과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내 수소경제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의 실현을 위해 40MW이상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지대로 지정하고, 주변지역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비전을 그렸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

을 통해 발전지구와 특성화 마을 지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발전지구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발굴하고 발전지구 지정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 특례를 통해 자체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체부품 시장의 저변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 생산, 인증, 수출의 전주기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체부품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도내 자동차 관련 기관·협회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관 공모를 실시해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광활한 새만금을 배경삼아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종합실증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미 새만금에 자율주행차, 농업기계, 해양무인 등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 중인 전북자치도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무인이동체 종합실증센터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설계부터 제작 및 인증까지 전단계를 아우르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특별법을 발판삼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테스트베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행위제한 모호성 없었다

민주 김운덕 의원,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의원(당 사무총장, 전주갑)은 지난 8일,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택지조성·수목식재 등의 특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와 행위제한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이 모호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주체가 상이하여 사업계획의 일관성을 저



해하고, 실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정비구역의 현존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

유산청장의 승인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해 불허로 인한 사업제한이 우려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며, 제한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중점

경관관리계획을 통해 관리토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실시계획 승인시 국가유산청 소관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현존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장의 승인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해 불허로 인한 사업제한이 우려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김운덕 의원은 “작년 9월 전주시가 ‘후백제역사문화권 건립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이를 위해 예산 바 있다”며, “기존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가지고 있던 행위제한의 모호성, 승인주체의 이원화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의 고충이 있어왔고, 이를 해결하여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민주 이성윤 의원, ‘사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헌정질서 수호·법치주의 강화 위한 필수 조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대통령 권한 위임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묻기 위한 ‘사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및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 외환죄 등 헌정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사면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고 있지만, 최근 윤석열 정권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행위를 저지르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가 국민적 법감정에 반하고 형벌 효과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수호하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를 높이고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만호 기자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새해 의정활동 계획 발표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지난 8일 고창군의회 의장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취임 후 지난 6개월간의 성과와 2025년 의정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조민규 의장은 2025년 올해 고창군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활동으로는 ‘한빛 원전 1, 2기 호기 수명연장’ 문제가 현안인 만큼 군민의 건강과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올해 확정될 상황에서 고창이 포함된 ‘새만금~목포 서해안 철도 노선’이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희 기자